

2015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출제의도,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인문계열 - 오후)



광운대학교 입학처

## 2015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오후)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지 상의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정색볼펜”으로 정확히 기재 및 마킹(진하게)바랍니다.
- 답안 작성란은 “검정색볼펜” 또는 “검정색 연필(샤프)”로 작성하십시오.  
 ※ 검정색 이외(빨간색, 파란색 등) 사용 금지  
 ※ 지우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문제 1] 제시문 (나)의 내용을 통해서 제시문 (가)의 밑줄 친 ‘관용의 정신’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밑줄 친 ‘관용의 역설’ 현상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제시문 (라)의 밑줄 친 ‘불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밑줄 친 ‘근대적 인간 중심주의’에 대하여 비판하시오. (50점, 750±50자)

(가)

관용이란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관용의 정신은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타인의 관점을 허용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타인의 사고 방식과 존재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관용의 정신을 실천하는 대상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관용의 정신이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살인이나 폭력과 같이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의한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용의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면 관용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관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관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을 관용의 역설이라 한다.

(나)

일탈 행동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기본 질서와 규범을 깨뜨리고 사회 결속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일탈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 왔으며, 역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순기능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 발명가들의 비현실적인 발상이나 실험들, 예술가들의 초현실적이거나 전위적인 작업들과 같이 통념적이지 않은 사고나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일탈 행동의 대표적 예이다. 어떤 사회가 비일상적인 표현 방식이나 자유분방한 행동 방식을 일탈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억압한다면, 그 사회는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생동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특히 현대 사회처럼 개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나 자유의지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개성의 발달이 억압된다면 사회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일탈을 무조건 부정적인 행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다)

근대 문명은 휴머니즘적 가치관, 즉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근대적 인간 중심주의에는 다양하고 폭넓은 사상사적 흐름들이 포함되는데, 그 형성 초기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근대적인 ‘신(神) 중심 휴머니즘’의 창시자인 마리탱(Maritain, J.)을 들 수 있다. 그는 중세 유럽을 지배한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신이 부여한 자연법에서 유래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마리탱이 초안을 작성한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누구도 노예나 예속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되며, 잔혹한 형벌이나 모욕적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를 지닌다. 이러한 ‘신 중심 휴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적인 인격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복음으로 계시된 자유와 형제애의 정신, 정의와 우애의 덕, 인격 존중, 신 앞에서의 책임 의식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Bonhoeffer, D.)는 이러한 ‘신 중심 휴머니즘’을 실천에 옮긴 ‘행동하는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른 히틀러와 나치스 체제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다. 본회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친 사람이 베를린의 변화한 거리에서 인도 위로 차를 몰고 다닌다면 나는 목사로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만일 그 현장에 있다면 나는 거리로 뛰어들어 그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다음 장 계속>

(라)

불교에서는 성별과 인종, 신분과 계층의 차이를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고 여긴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불교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모든 생명체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만든다. 또한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가르친다.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에 따르면, 나는 고정 불변한 존재도 아니고 세계와 분리된 존재도 아니며, 세상의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나와 연관되어 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이 소중하듯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자비심을 갖게 된다.

이처럼 평등적 세계관과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는 대립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평등한 세계를 지향한다. 따라서 **불교적 세계관**은 비단 인간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집단 간의 차별과 억압이나 대립과 갈등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른 모든 생명체에게 가하는 지배와 착취, 폭력과 살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 세계의 지배자, 역사의 주인공으로 당연시해 온 근대적 인간 중심주의의 독선과 불관용성에 대하여 심오한 비판의 경종을 울린다.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이기심과 탐욕, 갈등과 전쟁,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를 지양하고 만물과 인간이 조화롭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평화의 세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다음 장 계속>

[문제 2]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 설명하고,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내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문 (다)와 (라)에서 찾아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실업률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만 15세 이상의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조기 퇴직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동참하는 기업들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09년 실업률이 9% 이상으로 치솟자 미국 정부는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무 시간과 봉급을 줄이는 기업에 실업 기금의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펼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실업 방지 정책이 법으로 강제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직자가 자신의 능력을 평등하게 평가받을 권리와 기업이 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나)

인간은 일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 삶을 유지하며 자아를 실현한다. 그러나 인간은 개인의 삶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職業)’에서 직(職)은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의미하며, 업(業)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노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 행위의 의미는 개인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직업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개인은 직업을 통해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사회는 개인의 직업 행위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즉 직업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 인격을 형성하는 일차적인 수단임과 동시에 개인과 사회를 잇는 중요한 연결 고리다. 따라서 실업자가 되면 개인은 소득이 줄어 소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좌절감과 우울증을 느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된다. 또한, 실업이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과 생산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생산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경제 규모가 축소되어 그 사회는 활력을 잃게 된다. 나아가 실업은 가족 해체, 생계형 범죄와 같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백성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하였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성들이란 안정적인 생업[항산(恒産)]이 있으면 떳떳한 마음[항심(恒心)]을 가지게 되고, 안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이 없게 된다.”

맹자가 말하는 항산(恒産)이란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말하고, 항심(恒心)은 인의(仁義)를 실천하는 착한 마음을 가리킨다. 맹자는 군주는 무릇 백성들의 가난 구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굶주린 백성이 도둑이 되었을 때는 처벌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맹자의 가르침을 오늘날 사회에 적용시킨다면 국가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능은 공공선의 증진으로 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서 공공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첫 번째가 생존에 관계된 기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능은 생활에 관계된 것으로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다음 장 계속>

(라)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과 같은 선천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조건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의 차이로 노력과 상관 없이 불평등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사회를 정의롭다거나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천적 조건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공정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신분이나 경제력 같은 사회적 조건 때문에 출발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조절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재산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상속세와 양도세에 누진세 제도를 적용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 등이 그 예이다.

인간 평등을 강조하는 형식적 정의가 '각자에게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질적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라는 단어가 원래 '공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똑같은 것을 주기보다는 각자의 형편과 입장 그리고 노력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 공정한 정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버드대 정치 철학 교수였던 롤스(Rawls, J.)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적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하도록 불평등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은 기회 균등과 평등한 자유의 보장을 위한 토대가 된다.

<끝>